

↑ 코스피	2634.70	↑ 코스닥	855.65
	(+50.52)		(+22.62)
↓ 금리 (연율)	3.427	↓ 환율 (원/달러)	1372.90
	(-0.048)		(-13.90)

신동빈 롯데회장
말레이 공장서
현장경영
02



m-커버스토리

‘정부24 먹통’ 오명 벗겠다는 정부... 근본문제는 외면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 1년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 공모
납품대가 등 과거와 다르지 않아
가치 인정·거래구조 개선 시급

‘제2의 정부24 먹통 사태’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핵심문제를 외면한 채 속도만 내고 있어서다.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

부를 구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정부24’ 먹통 사태 당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사업 컨트롤타워 부재 ▲담당 공무원의 잦은 업무단절 ▲비현실적인 대가 및 사업 규모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최약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업계는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는 공공SW 대가 상향 등 폐단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공언했지만 감감 무소식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가장 최근 공모 사업 조차 별도 규칙 등 없이 과거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출범 만 1년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공모를 시작했다. 디지털 정부 구축은 전적으로 정부가 아닌 발주 사업으로 진행된다.

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 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해 컨설팅, 시험테스트(PoC), 이 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있다.

지난해 49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74%(367억원) 삭감되며 논란이 일었던 전자정부예산을 초거대AI 활용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는 데 성공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디플정위원회 김민표 정책기획국

장은 “디플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그간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부문 초거대AI 활용의 적용·검증을 추진해 왔고, 올해에는 공공서비스 성과 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거대AI 기반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사회현안 해결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 공모를 확인한 IT 관계자 A씨는 “변한 게 없다”고 딱 잘라 지적했다.

<4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최 부총리. /뉴시스

인건비 줄여 인공지능 투자 IT업계, 작년 26만명 ‘해고’

경기침체 속 AI 중심 투자 불가피
경영 악화에 국내시장 철수 행진

한 때 잘나갔던 글로벌 IT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도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AI 중심으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기 위한 비용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글로벌 IT업계 감원을 집계하는 ‘레이오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IT 기업 1183곳에서 26만1997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58.8% 증가한 규모다.

실제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광고 영업팀 직원 수 백명을 해고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투자하려면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월 전체 정규직 직원의 6%에 해당하는 약 1만2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글로벌 채용 조직과 뉴스 부서를 대상으로 정리 해고에 돌입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트위터는 전체 직원의 35% 수주인 500명 이상의 인

력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랜시 CEO는 “불행히도 회사의 규모를 적대화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며, 트위터 전체에서 5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하는 고통스러운 단계를 밟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글로벌 IT업계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이유는 생성형 AI 확대에 인한 비용 효율화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대한의 비용을 감축하는 작업에 나선 것. 특히 IT업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채용을 단행했지만, 최근 생성형 AI가 이들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면서 인력이 기존만큼 필요 없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IT업계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경영 악화로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연이어 철수하고 있다.

글로벌 게임사 유비소프트 한국 지사는 이달 30일부로 공식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비소프트코리아는 지난 9월 X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 지사 운영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지난 2월 중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시 클랜시 트위터 CEO는 “망사 용료 비용 때문에 한국 시장이 성장하고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공급망 교란·금융불안 등 3국 공조해야”

역대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긴밀 협력해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자재 공급망 교란 및 금융시장 불안 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으나, 팬데믹과 지정학적(geo-economics)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 안보가 또 다른 정책 목

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번 3국 재무장관 간 회의는 사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측면이 강하다.

역대 처음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로,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마주했다.

그는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

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위기·지속가능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역대 처음 개최된 데 대해서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은 최초의 3국 간 회담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연대를 천명했다”며 “우리 국민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수도권 당선인들 “당 수도권 중심 재편” “비대위 빨리 출범시켜야”
▲ 총선 직후 윤 지지율, 11%p 하락한 27%... 취임 후 최저 (사진 뉴시스)

▲ 윤, 비서실장에 장제원 유력 검토...이르면 19일 인사
▲ 민주당, 수원지검·대검 찾아 ‘검찰 술자리 회유’ 항의... “감찰권 발동해야”



▲ 이재명,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희생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후퇴” (사진 뉴시스)
▲ 홍준표 “유례없이 총선 말아먹은 한동훈, 다시 받아들이고 공간있나”